

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	보 도 자 료 2013. 3. 22일(금) 14: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Service
--	--	--

제공일자	2013. 3. 21(목)	담당자	국민연금공단	백수현 연구지원부장(3218-8610)	
			보험연구원	류건식 선임연구위원(3775-9013)	
홍보담당	국민연금공단		신재철 차장(02-2240-1042)		총5매
	보험연구원		김세환 부장(02-3775-9051)		

제목 : 『새정부의 연금정책, 어떻게 할 것인가?』 세미나 개최

1. 세미나 안내

☐ 개최 배경

-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저출산·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. 특히, 인구의 27%를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후소득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.
- 국민연금, 개인연금, 퇴직연금 등의 잇따른 도입으로 다층소득 보장제도가 수립되었지만,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새정부의 연금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공동세미나를 개최

☐ 주최 : 국민연금연구원, 보험연구원

☐ 주관 : 유일호 의원실, 유재중 의원실, 홍종학 의원실

☐ 일시 및 장소 : **2013. 3. 22(금), 14:00 ~ 17:00**
국회도서관 대회의실

□ 세부일정

- 개 회 사 : 김대식 원장(보험연구원), 김성숙 원장(국민연금연구원)
- 환 영 사 : 유일호 의원, 유재중 의원, 홍종학 의원
- 사 회 : 김원식 교수(건국대학교)
- 제 1주제 : 공적연금의 역할과 정책방향
 - 김용하 교수(순천향대학교, 전 보건사회연구원장)
- 제 2주제 : 사적연금의 역할과 정책방향
 - 류건식 선임연구위원(보험연구원)
- 토 론 : 학계, 업계, 언론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 및 질의·응답

2. 주요 내용

〈제1주제〉 공적연금의 역할과 정책방향

-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는 공적연금의 재정전망과 선진국의 연금개혁 동향을 토대로 공적연금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.
- 1990년대 이후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점진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력하게 개혁되고 있음.
 - 연금개혁은 단순히 연금 재정지출의 안정화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노후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.
 - 미래의 연금재정지출의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되어야 하겠지만, 궁극적으로는 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의 악화를 완화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함을 선진국의 연금개혁 사례에서 배울 수 있음.

-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일차적으로는 연금보험료를
상향 조정하는 것이 대안이지만 경제불황에 가계부채 문제
등이 존재하고 있어 단기간에 보험료를 높이는 쉽지 않음.
 - 특히, 최근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
금보험료 조정 혹은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 정책이 발표된다면
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감이 증폭될 우려가 있음.
 - 연금보험료 조정시기는 연금급여지출과 연금보험료 수입이 교차
되는 시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, 경제상황, 국민 가계
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, 연금수급개시
연령 역시 정년의 연장 등과 연동할 필요가 있음.
- 대통령직 인수위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
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한다는 국정공약
을 발표
 - 「국민행복연금위원회」를 구성,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 방
안을 마련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.
 - 기초노령연금은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
므로 적정 수준으로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되, 지
급대상 등은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

〈제2주제〉 사적연금의 역할과 정책방향

-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증대되는 가운데에도 소득의 양극화 심화로 노후대비가 미흡한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적노후소득보장체계(퇴직연금, 개인연금)를 전면 개편할 것을 주장함.

* 사적보장의 취약계층 : 저소득근로자, 비정규직 임금근로자, 소규모 영세사업장, 50세이상 저소득 베이비 부머, 자영업자 등

소득계층별 비중 추이



소득분위별 노후준비

(단위 : %, 가구)

구분	노후준비 하고 있음	노후준비 하고 있지 않음
1분위	33.1	66.9
2분위	57.1	42.9
3분위	78.5	21.5
4분위	88.9	11.1
5분위	94.9	5.1
전체 (N)	70.4 (2,131)	29.6 (894)

- 실제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(2012년 12월말)은 9.6%, 1,2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8.3%에 불과해 사적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함.

- 또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가입마저 불가능하고, 50세 이상 중장년층 베이비부머는 사교육지출 등으로 본인의 노후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
- 따라서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여력이 없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독일식 리스터 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함.
- 10인 이하 영세소규모사업장(특히 4인이하 사업장)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여 주고 근로자 등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국가차원에서 보조해 줄 필요가 있음.
-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소득보장제도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퇴직연금 가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5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는 연금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추가기여제도(catch up plan)도입이 필요함.
- 이와 더불어 고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세제혜택이 가는 소득공제방식에서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이 가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고 개인연금과 별도의 퇴직연금세제체계를 신설하여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할 것을 제안함.
- * 소득공제(400만원 소득공제)방식 적용: 3억원이상 소득자 세제혜택 최대 152만원(1200만원이하 저소득계층 세제혜택 최대 25만원)
- 55세 이상 퇴직자의 97.9%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으나, 근로자의 복지권 차원에서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을 인정(예: 25%)하되, 나머지 75%는 연금 수령을 의무화하는 부분연금화 방안 검토가 요구됨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